

해외 청년보장제도와 한국의 청년수당 개선방향

김 종 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1 문제인식 출발

어떤 청년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일까?

세계일보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012면 종합

2400명 면접 정장 고민 덜어준 '취업날개'

서울시 무료 대어 서비스 인기 시행 6개월-하루 15.8명 이용

김예진 기자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 시 필요한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이용 횟수가 2400건에 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4월 말 시작한 면접 정장 무료 대어 서비스인 '취업날개'를 이용한 청년이 2371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하루 평균 15.8명이 이용한 셈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 중 90% (2136명)는 20대였다. 성별로는 여성

이 63%(1493명)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취업날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공유기업 '열린옷장'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면접 때 입을 정장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 구직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어 횟수는 1인당 두 번이며 대어 기간은 3박4일이다.

특히 대어 시 전문가가 청년 구직자의 신체 치수를 측정하고 취업 목적과 체형에 어울리는 정장을 골라주고, 정장을 고르고 난 뒤에는 맞춤형 수선을 해주기도 한다. 열린옷장에서는 정장 1000여 벌과 넥타이, 벨트, 구두 등 액세서리 3500점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꼭 필

요한 정장을 질 좋게 수선에 필요한 시점에 바로 제공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호응을 얻은 것이며,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비싼 면접용 정장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총 4000명의 청년에게 정장을 대여할 계획이다. 정장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공유기업 '열린옷장'을 방문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취업준비생들이 구직과정에서 부담하는 부담을 철저히 분석해 꼭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2016년 11월 01일 화요일 020면 종합

지자체들 눈치보기 속 '청년수당' 추진

중앙정부와 협의에 집중·성남시 청년배당 막아선 경기도도 추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정부와의 갈등으로 지급이 지연된 가운데 인천시와 경기도 등 청년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한 각 지자체들이 연이어 청년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인천시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자가격류 취득 점수비와 사생활임비, 면접복장대여비 등 직접적인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매달 2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원한다는 내용의 '청년사회적응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형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청년구직지원금'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발표한 '청년구직지원금'에는 저소득층 청년 중 구직 의사가 확인된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으로 서울시 청년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현금이나 포인트 카드(미유지) 형태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이다. 경기도의 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28일 새누리당과 내년도 연정 예산으로 경기도형 청년구직 지원금 1600억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이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청년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앞서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지극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시행 단계의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이경관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유정혜 인천시장(오른쪽)이 31일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로 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1일 유정혜 인천시장과 이경관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취업의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경관 고용노동 장관은 인천시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독자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앞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기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청년구직지원금'이 기본-계 획되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서울시의 밀정 공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각 지자체들이 발표한 청년정

책이 행방성에 어긋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관 성남시장은 "경기도가 성남시가 펼치고 있는 청년정책인 청년배당은 '물방'이라며 대안 마련에 계소하고, 자신들이 하는 (청년지원정책은) 낱알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지 않는다"며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시작하는 게 정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이 취업에서 취업이외의 긴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문에 인식에 따라 체제가 공감을 하는 것 같다"며 "이런 정책적 움직임이 실무자를 갖고 확산돼 가는 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조용준 기자 joyongjun@tomato.com

東亞日報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A18면 종합

“월 10만원씩 저축뎌 3년뒤 1000만원 지급”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5.4 대 1 경쟁

경기도는 저소득 근로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2차 사업에 5377명이 지원해 약 5.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18~34세의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17만2000원을 지원해 3년 후 이자를 포함해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

도-새누리당이 합의한 연정(聯政)의 대표적 추진 과제다. 올해 5월 실시된 시범사업에는 500명 모집에 3301명이 지원해 약 6.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소득인정액 조사 등 심사를 거쳐 11월 28일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24일 청년통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직업과 급여 및 생활수준 등을 분석해 3년간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지원 대상을 1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1-2 문제인식 출발

Youth Guaran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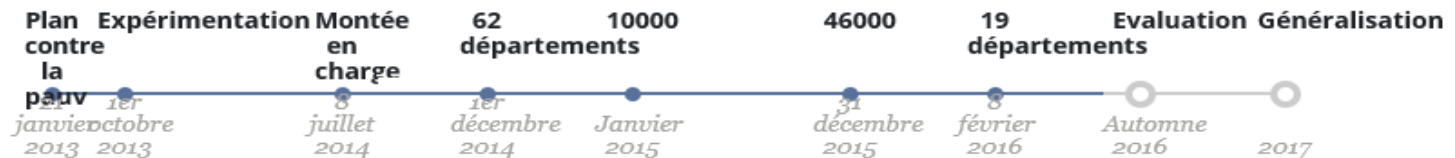


Redonner la priorité à la jeunesse

La Garantie jeunes

Mis à jour le 12 mai 2016 - Projet porté par Myriam El Khomri, Patrick Kanner, Clotilde Valter

Pour les jeunes de 16-25 ans en situation de grande vulnérabilité sur le marché du travail, le Gouvernement a mis en place la Garantie jeunes. Un dispositif donnant à ces jeunes la chance d'une intégration sociale et professionnelle grâce à un parcours intensif de formation et d'accès à l'emploi. Le projet de loi travail prévoit la généralisation du dispositif en 2017.



1-3 문제인식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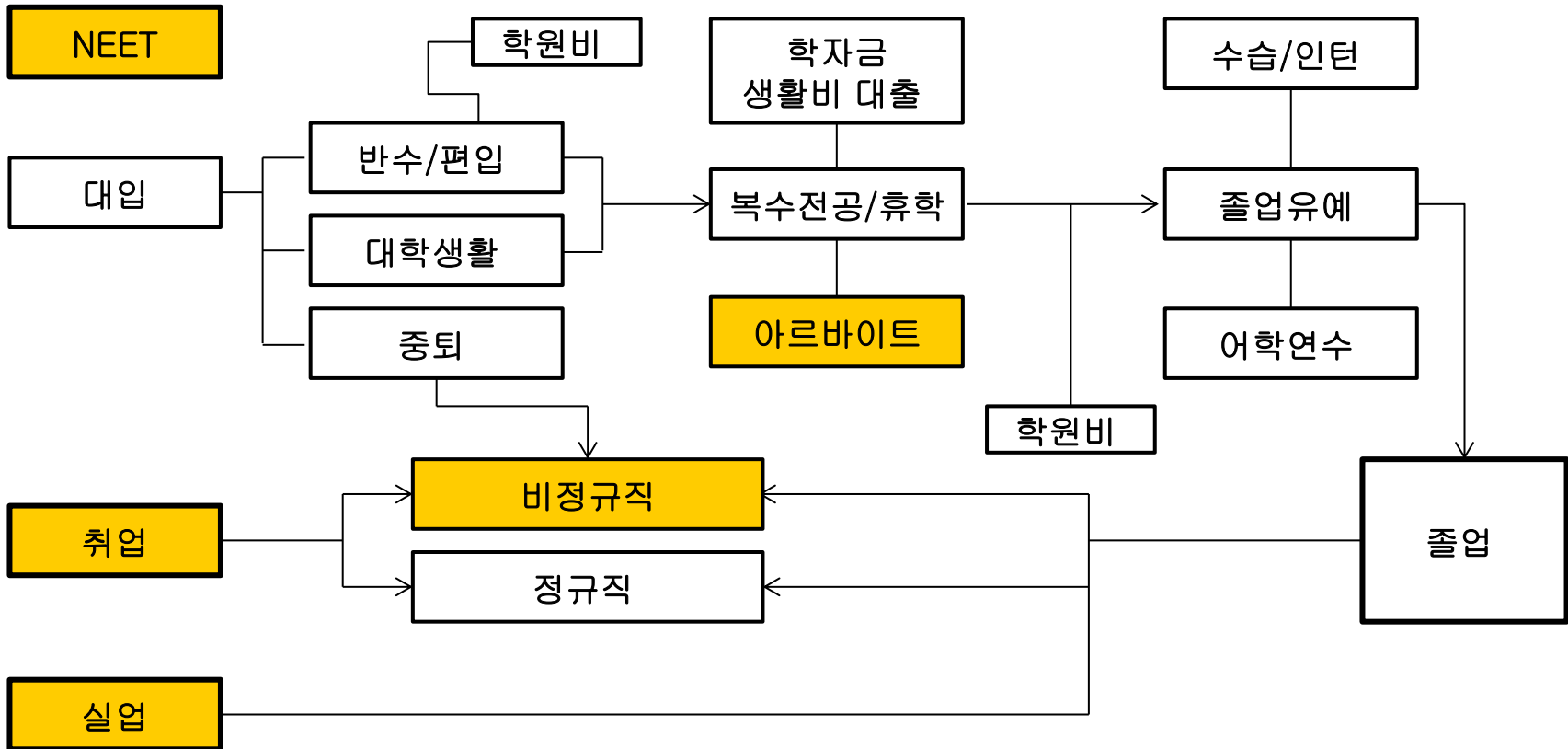
- **첫째**, 우리나라 전국 및 서울지역 청년 노동시장 실태는 어떤 상황이며, 청년니트로 표현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둘째**,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청년고용정책은 어떤 상황이며, 해외 및 국제기구 청년정책 및 청년보장제도 논의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셋째**, 서울시 청년보장제도와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벤치마킹 사례인 프랑스 청년보장제도 내용은 무엇이고, 지자체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 **넷째**, 현재 서울시 청년보장제도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2-1 우리나라 청년 이행기 노동시장 모형



취업과 실업에서 벗어나, 아르바이트, 인턴, 니트 등 다양한 청년 현실 조망 필요

2-2 서울지역 청년 노동시장 및 니트 현황

2015년(천명)	15세~19세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계
생산가능인구	535.4	608.8	818.4	885.9	2,848.4(100.0%)
취업자	34.2	274.3	557.8	698.8	1,565.1(54.9%)
비취업자	501.1	334.5	260.6	187.1	1,283.3(45.1%)
재학	479.6	243.5	105.4	15.8	844.2(29.6%)
건강 문제, 군입대 대기 등	4.1	8.9	3.8	2.7	19.5(0.7%)
광의의 니트	17.4	82.2	151.4	168.6	419.6(14.7%)
구직니트(실업)	2.1	26.1	42.8	22.0	93.1(3.3%)
구직준비니트	11.5	27.6	38.4	11.2	88.7(3.1%)
가족내노동니트	0.2	7.0	34.8	109.3	151.4(5.3%)
비구직니트	3.6	21.5	35.4	26.0	86.4(3.0%)

- 청년 인구(15세~34세) : 284만8천명
- 경제 활동인구 : 165만5천명 → 취업자 : 156만5천명(54.9%), 실업자 : 9만3천명(5.6%)
- 서울 광의 청년니트 : 14.7%, 42만명 (협의 청년니트 26만8천명)
- 전국 광의 청년니트 : 15.8%, 209만명 (협의 청년니트 120만명)
- 청년 비정규직 : 529,000명(37.2%) → 시간제 근로 : 115,100명(8.1%), 초단시간 근로 : 50,900명(3.6%)

2-3 국내 청년정책 인식과 논의

1. 국내 청년정책 일반적 상황 ‘중앙부처 청년정책 한계’

- ✓ 기존 정부의 일자리 및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못하는(혹은 벗어나는) 청년층 증가하고 있고,
- ✓ 법적 보호(안전성 security)나 제도적,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안정성 stability) 미약하고,
- ✓ 기존 취업 프로그램은 청년 니즈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청년니트 지원프로그램은 없는 현실이며,
- ✓ 장기간 취업 실패, 학업 지속하다 중간 포기하고 취업 하려는 청년 대책 없는 상황

2.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 일자리, 직업훈련 영역(26개)

취업지원(10개)	일자리 창출 지원(4개)	직업능력개발 지원(12개)
1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2 취업성공패키지 3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4 취업지원관 사업 5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6 해외 취업지원 7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보급·확산 8 스펙초월 멘토스쿨 9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0 청년취업아카데미	11 사회적기업가 육성 1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13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4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15 일학습병행제 16 기술·기능인력 양성 17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18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19 내일배움카드 20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2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2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3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 24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25 기업대학 26 산업단지 유관사업 패키지 지원

2-4 국내 청년정책 제도화 논의 특징

1. 20대 국회 <청년기본법> 4개 법안 발의

→ 2017년 상반기 1개 추가 법안 상정 예정(박주민 의원)

4개 청년기본법 법안 특징

- ① 청년 소득 지원
- ② 기본법적 성격
- ③ 지원 예산 관련
- ④ 청년영향평가
- ⑤ 기본시책 주요 특징

청년기본법 주요 쟁점

- ✓ 청년정책 총괄 관할 부처
[기재부, 노동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
- ✓ 청년 연령대
[15세~25세, 15세~29세, 15세~34세, 15세~39세]

2. 지방정부 청년정책 제도화 영역

- △조례 제정(청년기본조례) △정책 수립(청년정책기본계획) △행정조직(전담 부서, 인력)
- △지원조직(센터) △거버넌스(위원회, 네트워크)

- 조례 제정 : 10곳(서울,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대전)
- 행정조직 : 14곳(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제외)
- 중간지원 조직 : 3곳(서울, 대구, 광주)
- 구직지원 예정 : 4곳(서울, 경기, 인천, 광주)

2-5 국내 청년정책 지방정부 제도화 현황 - 광역 지자체

	조례	제정	대상범위	행정조직	실행부서-팀(인력)	지원조직
서울	청년기본조례	2015.1.2	청년고용 특별법적용 (34세)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7) 활동지원팀(4) 공간지원팀(5)	청년허브(24), 청년활동지원센터(19)
				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4)	
부산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5.22	무	일자리창출과	청년취업지원팀(5)	
대구	청년기본조례	2015.12.30	19-34세	시민소통과	청년정책팀(4), 청년사업팀(4)	청년센터(7)
인천						
광주	청년정책기본조례	2015.12.28	19-34세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5), 지원담당팀(5), 교육지원(4)	더 숲(6)
대전	청년기본조례	2016.10.20	19-34세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4)	
울산						
경기	청년정책기본조례	2015.8.13	청년고용 특별법적용 (34세)	아동청소년과	청년지원팀(6)	
강원						
충북	청년정책기본조례	2015.5.24	15-39세	청년지원과	청년정책팀(4), 일자리팀(3), 복지팀(4)	
충남				지속가능정책담당관	청년팀장(1)	
전북				일자리경제정책관	청년정책팀(5)	
전남	청년발전기본조례	2015.7.23	18-34세	일자리정책지원관	청년일자리팀(2)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4), 인재육성팀(4)	
경북				청년취업과	청년취업정책팀(9)	
경남	청년발전기본조례	2016.6.9	18-39세	고용정책단	청년일자리담당팀(3)	
제주	청년기본	2016.6.22	19-34세	평생교육과	청년정책팀(3)	

2-6 서울시의 새로운 청년정책 접근

서울시
기존과 다른 청년정책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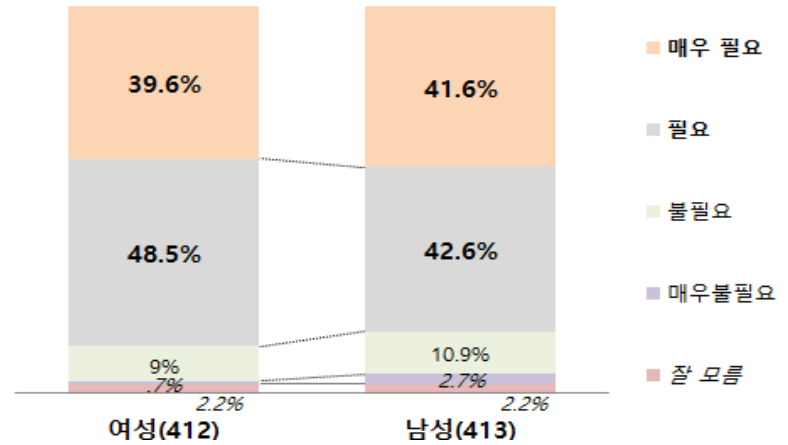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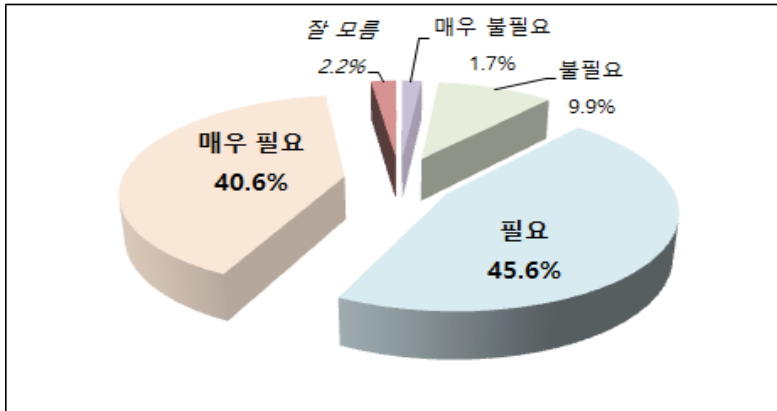
→ 2015년 ‘서울시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Seoul) 발표

서울시 청년보장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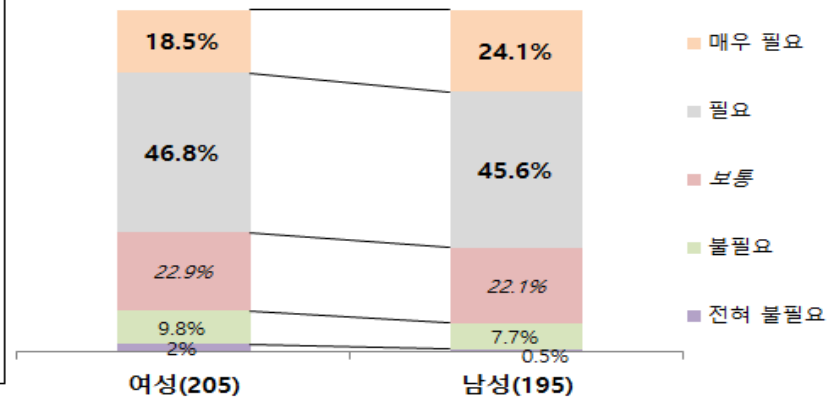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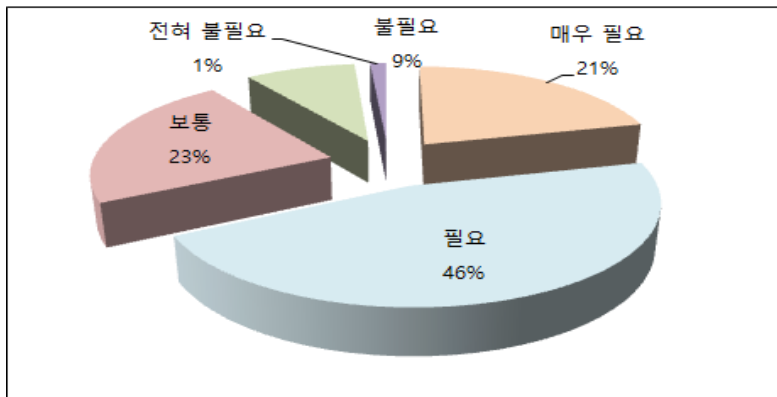
- ✓ 제도화(rule setting) - 청년기본조례(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2015.1.2.) 제정
정책 연구 - 거버넌스(위원회, 분과) - 의견수렴(컨퍼런스, 청년의회, 포럼)
- ✓ 모범 사용자(model employer) - 서울시 청년보장제 (4개 영역)
일자리(일 경험) - **설자리**(사회참여활동) - **살자리**(주거) - **놀자리**(공유공간)
서울시 ‘청년보장플랜’ 통합 구성
청년 자립(일 경험, 주거) 지원 → 청년 활동을 사회 역량으로 전환 계기(사회참여, 활동공간)
- ✓ 이행 점검(monitoring) - 청년위원회, 청년의회 등

2-7 서울지역 청년활동지원사업 - 청년수당 필요성 의견

- ✓ 서울 20대 아르바이트 의견조사(2016년, 825명)
청년수당 도입 필요성 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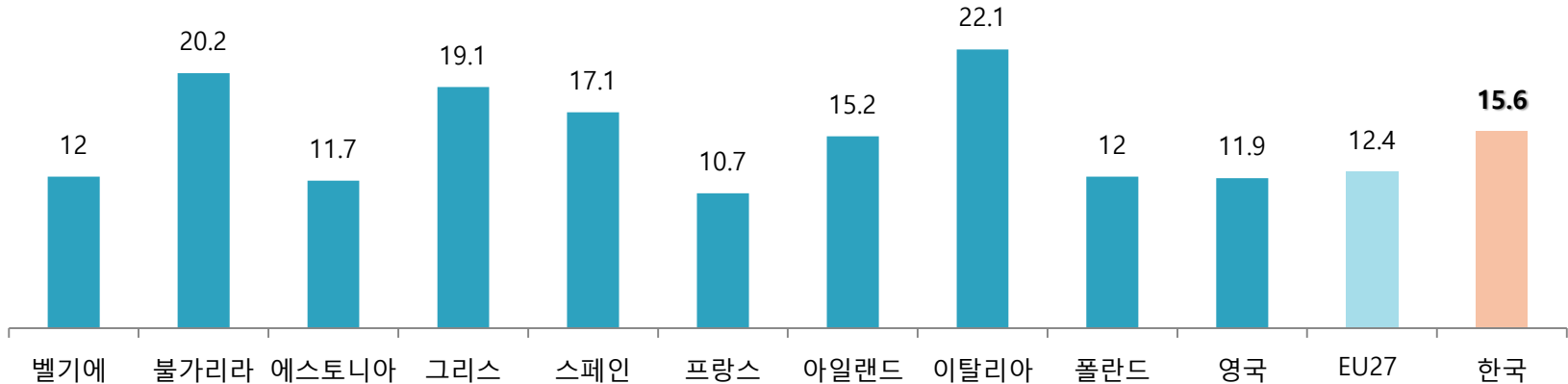
- ✓ 서울 노원구 시민 의견조사(2016년, 400명)
청년수당 도입 필요성 67%



3-1 해외 청년정책의 새로운 접근 - Youth Guarantee

1. 청년 취약층과 사회적 배제 집단 우선 대상 - 2013년 EU 권고

유럽연합(EU) 청년니트 27개국 평균 12.7%(한국 15.6%)



2.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 배경, 특징

- ① 미래 세대 지속 가능한 고용 제공 위해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 실시
- ②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높은 청년 실업률 완화 위해 2014~2020년까지 다양한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시행 → 실업률 25% 지역 우선 시범 시행(EU와 개별 나라 매칭제도)
- ③ 일자리, 교육, 도제제도, 실습 기회제공, 진로 지도 및 상담 등 폭 넓은 서비스 제공
- ④ 일부 회원국은 취약한 청년층 대상 임금 보조금 지원, 특별 훈련 프로그램 실시, 가정 방문 통한 훈련 및 실습 참여 유도 → 프랑스 알로카시옹(청년수당 지급)

3-2 국제기구 청년정책 논의 -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ILO 청년실업해소 방안 - 5개

- ① 재정지원 통해 노동수요 증가 가능한 고용정책과 경제정책
- ②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간 숙련 불일치 해소, 학교 업무 현장으로 이행 정책
- ③ 가정 형편 어려운 청년 취업 돕는 노동 시장 정책
- ④ 청년층 창업과 회사 설립 유도 정책
- ⑤ 전 세계 청년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

OECD 청년 우선지원 정책 그룹

- ① NEET족
- ② 노동시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신규 진입자
- ③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대졸 졸업자

3-3 유럽연합 청년정책 입법화 현황

1. 청년정책 법령 제도화 유형 3가지

청년 단일법령 국가 (Youth Act)	노동법	헌법적 조항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Code du travail)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이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2. 프랑스 '청년보장제' 2017년 전면 시행

2016년 8월 8일 노동법(Code du travail) 개정안 제46조(L'article 46 de la loi n°2016-1088 du 8 août 2016)

2016년 12월 23일 시행령(Le décret n°2016-1855 du 23 décembre 2016)

→ 엘 콤리 법(loi El Khomri)

3-4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 특징 - 시기, 대상, 자격, 기간

✓ 실업 상태 : 14개국

✓ 니트족 : 5개국

✓ 25세 미만 : 16개국

✓ 30세 미만 : 3개국

✓ 참여 기간 4개월 : 14개국

✓ 참여 기간 3개월 : 5개국

	발표일	대상	자격 기준	최대 기간
오스트리아	2014년 3월	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업 상태이며 <input type="checkbox"/>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등록	3개월
벨기에	2014년 4월	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업 상태이며 <input type="checkbox"/>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등록	4개월
크로아티아	2014년 4월	3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업 상태	4개월
체코	2013년 12월	3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업 상태이며 <input type="checkbox"/> 적극적으로 구직 중인 자	4개월
덴마크	2014년 4월	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업 상태이며 <input type="checkbox"/>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등록	3개월
에스토니아	2014년 4월	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업 상태	4개월
핀란드	2014년 5월	25세 미만, 30세 미만 최근 대학 졸업자	<input type="checkbox"/> 니트족	3개월
프랑스	2013년 12월	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업 상태이며 <input type="checkbox"/>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등록	4개월
독일	2014년 4월	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업 상태이며 <input type="checkbox"/>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등록	3개월
헝가리	2014년 4월	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등록 <input type="checkbox"/> 니트족	4개월
아일랜드	2013년 12월	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업 상태이며 <input type="checkbox"/>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등록	4개월
이탈리아	2013년 12월	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업 상태이며 <input type="checkbox"/>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등록	4개월
룩셈부르크	2014년 5월	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업 상태	4개월
네덜란드	2014년 4월	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업 상태이며 <input type="checkbox"/>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등록	4개월
폴란드	2013년 12월	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업 상태이며 <input type="checkbox"/>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등록	4개월
포르투갈	2013년 12월	3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니트족	4개월
루마니아	2013년 12월	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니트족	4개월
스페인	2013년 12월	25세 미만, 30세 미만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니트족	4개월
스웨덴	2014년 4월	25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실업 상태이며 <input type="checkbox"/>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에 등록	3개월

3-4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 특징 - 이해당사자 참여 주체

✓ 청년보장제 이해당사자 참여 - 고용 및 교육 부처, 취업지원 서비스기관 등

	고용 담당 부서	사회 복지 담당 부서	유럽 사회 기금 청년 이니셔티브	교육 담당 부서	청년 노동 단체	기타	공공 취업 지원 서비스	청년 단체	지역 청년 단체	사회적 파트너	교육 부문	지방 정부	NGO
벨기에*	XX	XX	X	XX	X		XXX	X	X	XX	X	XX	
불가리아	X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에스토니아	XX	X	XX	XXX	XXX	X	XX	XX	XX	XX		X	x
그리스	XXX		X	X			XX			X	X	X	
스페인**	XXX	XXX (고용)	XX	XX		XX	XX	XX	X	X		XX	X
프랑스	XXX	XXX (고용)	XX (고용)	XX	XX	X	XX	X	XX				
아일랜드	XX	XXX	XX	XX	XX		XX	X		X	XX		X
이탈리아	XXX		XXX	XX	XX	XX	XX	X		X	X	XXX	X
폴란드	XX	X	XXX	X			XX		XX	X	X		
영국	XX		XX (LEP)***	X	X		XX			X		x	

주 : 1) 기타 부처(법무, 국방, 행정, 보건, 주택),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PES), 청년 단체(대표 단체), 지역 청년 단체(이행), NGO(소수자 단체)

2) XXX=관리 권한/조율, XX=주요 협력기관/이해관계자, X=관련 협력기관/이해관계자

*벨기에의 경우 연방과 지역의 구분 필요: 사회 복지는 (여전히) 연방 정부 소관이지만 교육과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는 지역 소관.

**벨기에와 비슷하게 스페인에서도 많은 업무 책임 지역 위임.

*** LEPs =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지역 기업 협력체

3-4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 특징 - 주요 시행 영역

✓ 청년보장제 정책 6개 영역 - 직접고용 창출 제한적, 지원과 보장 서비스

	취업 교육과 훈련	보충 교육과 학업 중단	취업 중개 서비스	직접 고용 창출	채용 유인책	창업 유인책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	○	○	○	○	○	○
크로아티아	○	○	○	○	○	○
체코	○	○	○			
덴마크	○	○	○		○	
에스토니아	○	○	○		○	
핀란드	○	○	○		○	○
프랑스	○	○	○		○	○
독일	○	○	○		○	○
헝가리	○	○	○		○	○
아일랜드	○	○	○	○	○	○
이탈리아	○	○	○		○	○
라트비아	○	○	○		○	○
리투아니아	○	○	○		○	○
룩셈부르크	○	○	○	○	○	○
네덜란드	○	○	○		○	○
폴란드	○	○	○		○	○
포르투갈	○	○	○		○	○
루마니아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3-5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도 논의 - 특징, 유형

EU 청년보장제 특징 - 6가지

- ① 청년실업 해결 즉각적 개입
- ② 청년층의 이탈 방지 목표
- ③ 견습(도제) 제도 주요 운영
- ④ 효과적 이행 위한 개혁 조치
- ⑤ 중간지원조직 역할(지역 센터)
- ⑥ 다양한 파트너십(대학, 학교, 연구기관, 사이트 운영)

EU 청년보장제 개입범주 - 7가지

- ① 청년들에게 다가가 참여 유도
- ② 정보, 상담, 지도
- ③ 학업-직업 이행 지원
- ④ 훈련 및 직무 체험 알선
- ⑤ 직업 교육과 훈련 및 견습 과정 중시
- ⑥ 청년기업가 양성
- ⑦ 고위험 집단 위한 조치

EU 청년보장제 유형 - 2가지

▲ A유형

: 중등교육·훈련을 끝마쳐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을 부드럽게 하는 것

▲ B유형

: 구체적으로 젊은 니트족 살피,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시 취업이나 교육, 훈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3-6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도 논의 - 효과적 이행 5가지 조치

① 법률 내용

- 청년보장의 실행을 위해 어떤 법률 조항이 개정되었는가? 예를 들면, 직업 교육과 훈련의 법적 기반 수정이나 나이에 따른 차별의 허용 여부

② 정책적 내용

- 정책 조항은 보다 나은 이행관계자 협력을 위해 어떤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마련되었는가?

③ 공공취업지원 서비스의 구조

- 공공취업지원 서비스가 청년들에게 대상이 특정되고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보다 잘 구비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④ 모니터링과 평가

- 각국은 청년보장의 틀 안에서 청년들을 위해 실시하는 조치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계획인가?

⑤ 직업 교육과 훈련 준비 내용과 미래 전망

- 직업교육훈련과 교육체계에 어떤 변화가 도입되었는가?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훈련 자리가 충분한가?

3-7 OECD의 청년보장제도 논의 시사점

첫째,

-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게도 시행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
-

둘째,

- 효과적인 청년보장제도 시행은 폭 넓은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며, 단발식의 정책보다는 총체적인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는 것
-

셋째,

-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 단순한 서비스로는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
-

넷째,

- 제도의 성공 여부는 개입 시기의 적설성에 달려 있다 것
-

다섯째,

- 노동시장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떠나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거나 노동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비활동인구로 남아 있을 우려가 있기에, 타깃 그룹의 선정과 철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

4-1 프랑스 청년보장제도 논의 시사점 - 질문

프랑스 청년보장 - 국가 정책인 동시에 유럽연합 정책

2016년 11월 ‘청년보장 평가를 위한 학술 위원회’에서 ‘중간 보고서’(Rapport intermédiaire) 발간

첫째, 청년보장은 어떤 범위에서 목표 집단에 도달하였는가?

둘째, 청년보장은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특히 미세용 로칼 조직과 동반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청년보장은 수혜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미쳤는가?

청년보장제도 참여 지원 5가지 조건

- ① 연령 : 16~25세 → 제도에 들어오는 시점에 26세 미만
- ② 경제활동 : NEET 상태 → 고용 상태가 아니고, 학생도 아니며, 직업 훈련에 미참여자
- ③ 거주 :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재정 지원 받지 않는자
- ④ 경제상태 : 불안정한 경제 상황 → 월 가능 수입(resource)이 2017년 1월 470.95유로 미만자
[단, 470.95유로와 612.24유로 사이 월수입 가진 지원자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진행 과정 검토 위원회 결정 따라 청년보장 참여 가능]
- ⑤ 프로그램 : 미세용 로칼 집중 동반 프로그램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자

청년보장 참여자 활동 수입 간주 3가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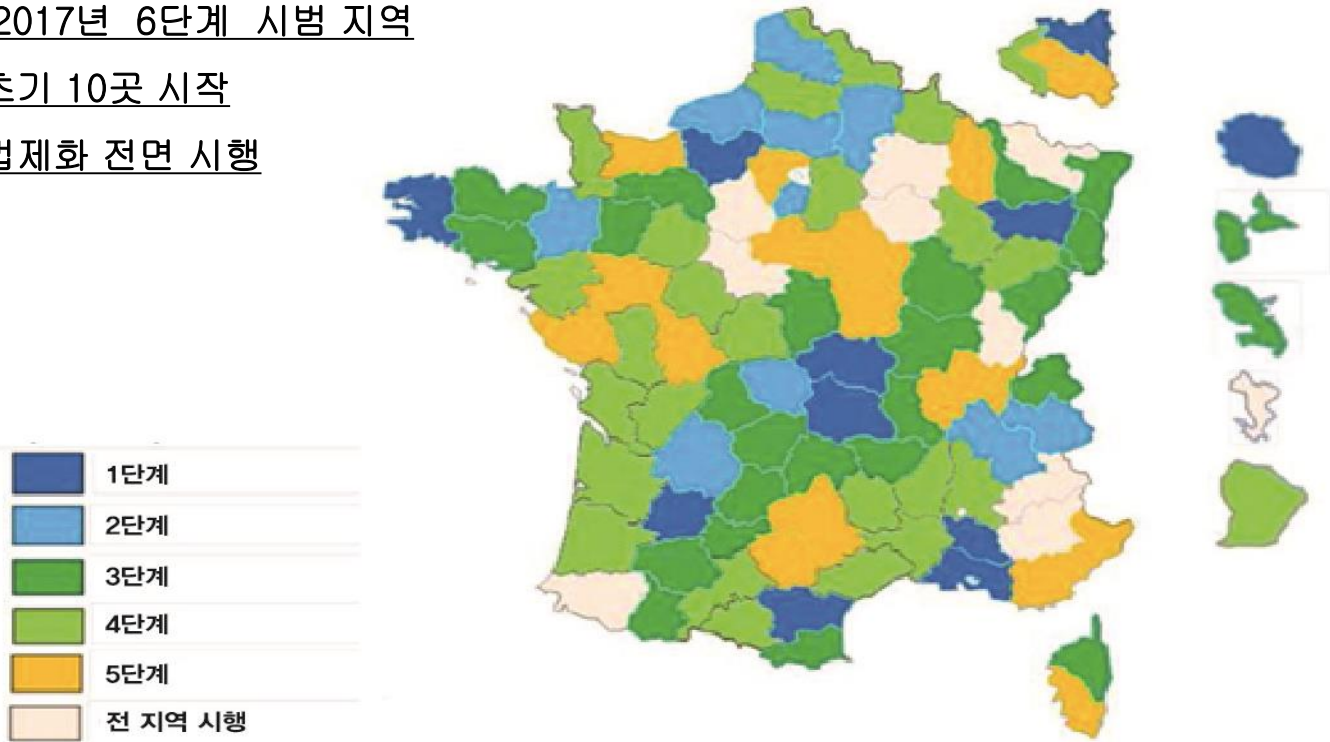
- ▲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대체 소득 및 직업 소득, 활동 소득, 사회보장 보상, 직업훈련 보상 등
- ▲ 장학금,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당
- ▲ 교육법이 규정하는 학생 실습에서 얻는 소득

청년보장 참여자 활동 수입 중복 해당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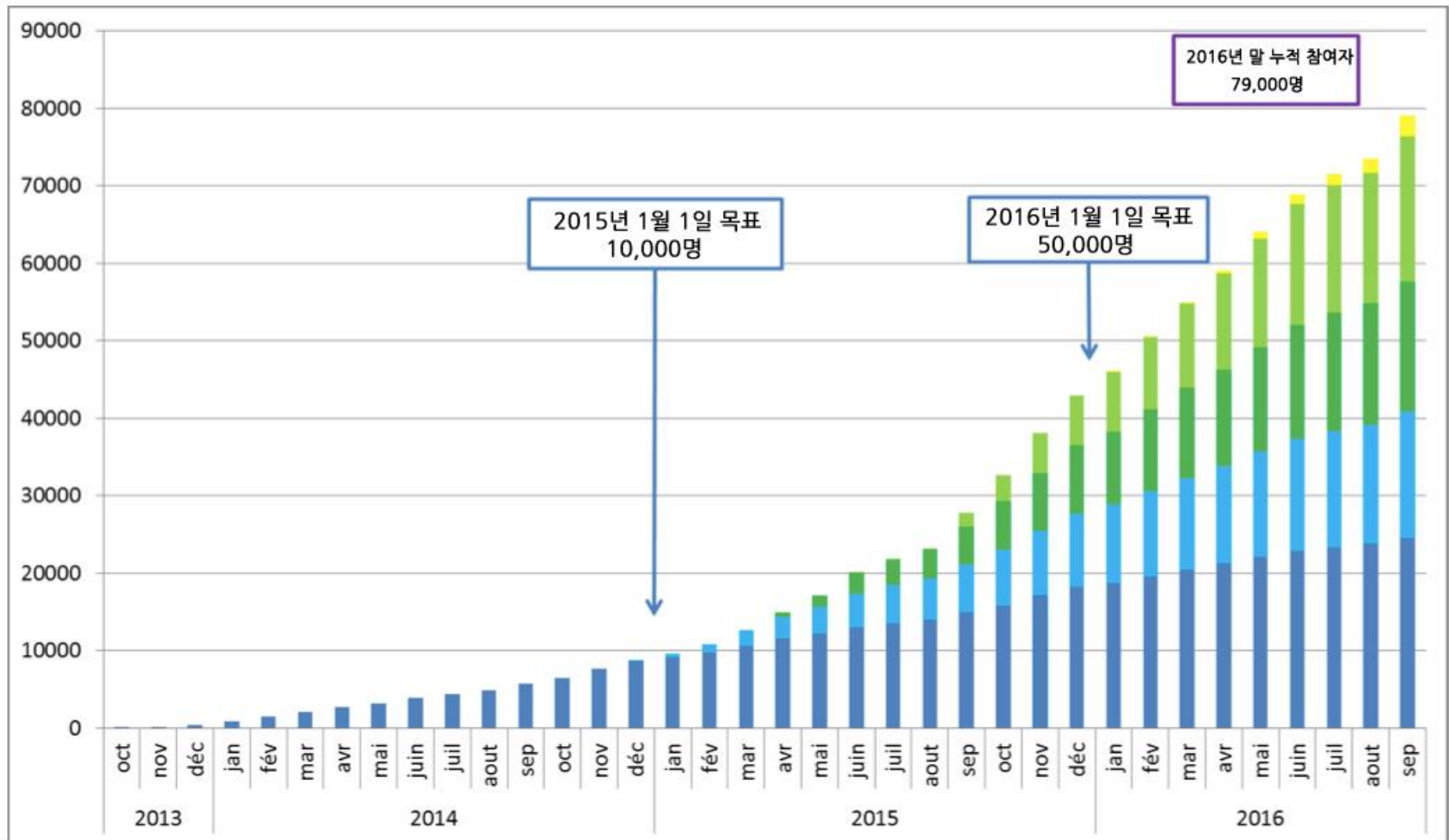
- ▲ 시민 서비스가 제공하는 보상. ATA(고용 대기 수당)가 제공하는 보상. → 이 보상 받는 동안 청년보장 수당은 지급 중지
- ▲ 사회보장법 L841-1에 언급된 경제활동 추가수당(단, 사회보장법 R842-3 규정된 경우 예외. 경제활동 추가수당 수급 권리가 생기는 시점부터 청년보장 수당 지급은 중단.(청년보장 참여 전 활동에 대한 경제활동 추가수당은 청년보장 수당과 중복 가능
- ▲ 사회적 지원활동과 가족에 관한 법 R262-3에서 규정한 사람을 제외하고, 청년보장 수당은 RSA와 중복될 수 없음. RSA 수혜자와 그들의 배우자 및 PACS(연대성 시민계약) 파트너도 청년보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수당 받지 못함.

4-2 프랑스 청년보장제도 논의 시사점 - 확대과정

- ✓ 2013년-2017년 6단계 시범 지역
- ✓ 2013년 초기 10곳 시작
- ✓ 2017년 법제화 전면 시행



4-3 프랑스 청년보장제도 논의 시사점 - 참여자 수



✓ 청년보장 시범 지역 참여자 증가

✓ 2015년 1월 1일 목표 1만명 → 2016년 1월 1일 목표 5만명

[참조] 프랑스 청년보장제도 담당 중간지원조직 사례 - 툴루즈 미션 로컬(40만 도시 6개)



프랑스 청년보장 담당 지역센터(미션 로컬, 툴루즈) -6개 지부 운영



미션 로컬 일자리 취업 박람회 모습1



미션 로컬, 툴루즈



미션 로컬, 툴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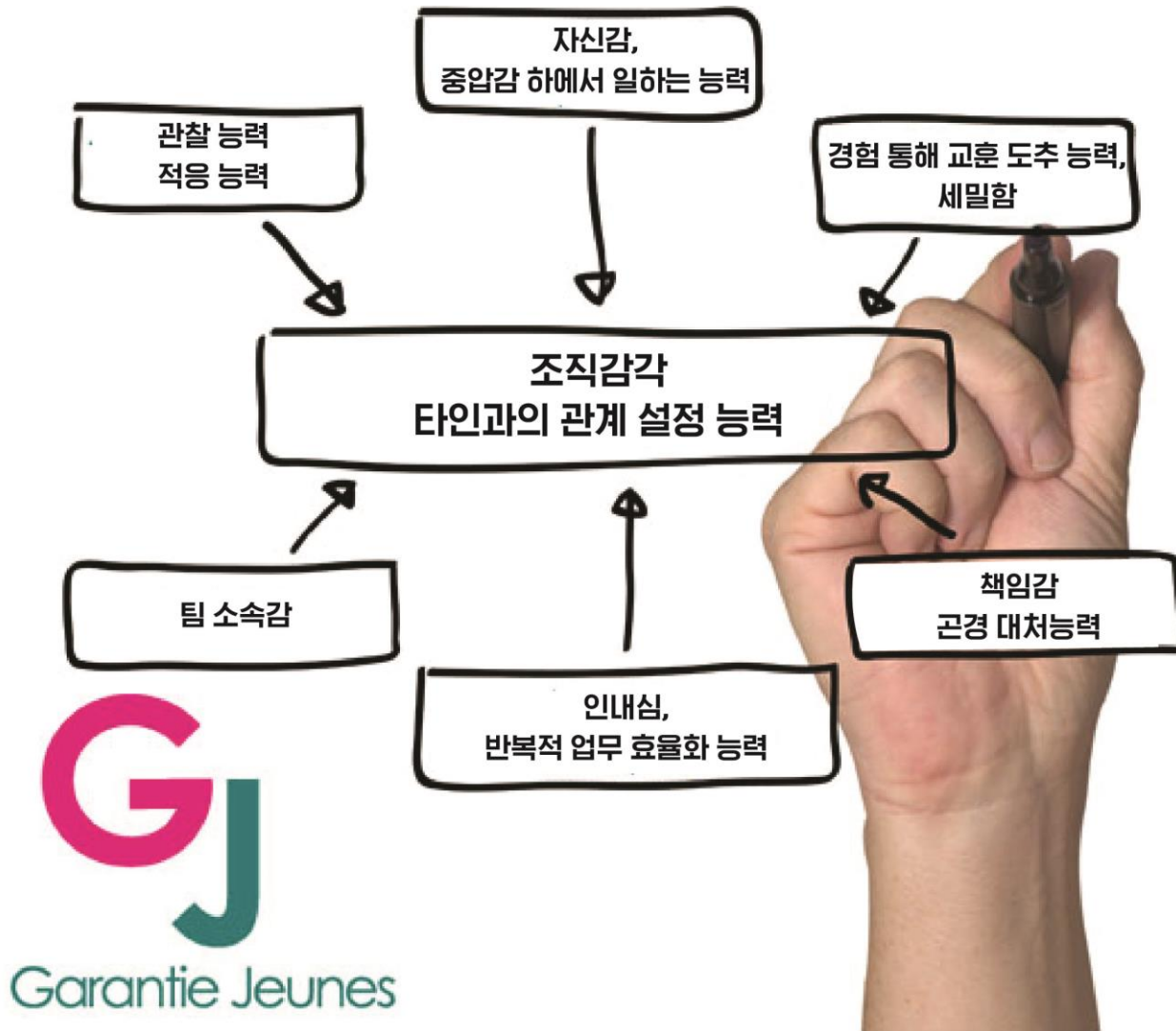


미션 로컬 일자리 취업 박람회 모습2

미세용 로컬

1990년대부터 CFI, PAQUE, TRACE, CIVIS 등 다양한 동반 프로그램 실행
 프랑스 약 450개(전국 13,000명, 재정: 중앙과 지방 등 매칭 운영, 청년 1인당 433유로)

[참조] 프랑스 청년보장제도 담당 중간지원조직 사례 - 미션 로컬 (역할: 상담, 멘토)



5-1 한국 및 서울시 청년보장제도 정책방향

1. 청년보장제 시행 제도화

국회 청년기본법 제출 4개 법안 → 20대 국회 통과, 청년 정책 시행 기준 필요

2. 청년보장제 방향 설정

청년 삶과 자기 모색, 진로 탐색 취업 및 교육 훈련 등 포괄적 노동시장 이행 정책

3. 청년보장제 자격 기준

실업 조기 개입(청년수당 20대 : 경제활동, 소득, 거주 형태 기준), 기타 지원 프로그램 34세

4. 청년보장제 참여 대상

국제적 청년 기준(ILO, EU, OECD)과 국내 노동시장 현실 고려 유형화 세부화 필요

5. 청년보장제 정보 공유

중앙과 지방, 유관기관의 다양한 공공 취업 지원 서비스 정보 활용, 공유 필요

6. 청년보장제 모범 사례

기초 지역과 광역 인근 지역, 대도시-중소도시, 도시형과 도농형 등 다양한 국내 특성 고려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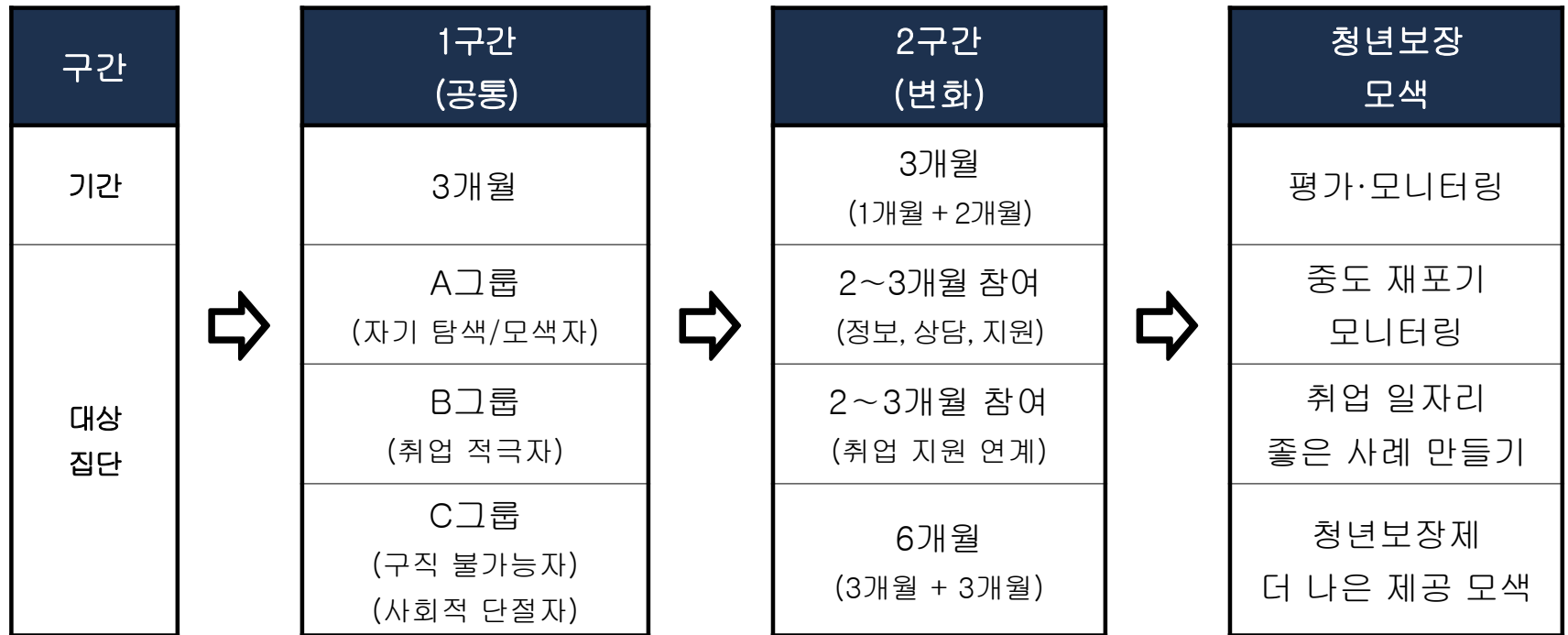
5-2 한국 청년보장제도 정책 대상 유형별 구분

국제노동기구(ILO) 청년정책 대상과 니트 현실 반영 5가지 유형

니트 유형화	니트 상태 및 실태	정책방향	청년보장 (4가지)	청년수당 기간, 금액
전통적 실업자	단기 및 장기실업자 장기실업자는 노동시장 취업 등 위험 집단	•초기 A그룹 → <u>B그룹 이동</u>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살자리	•4~6개월 •월 50만원
구직 불가능자	젊은 간병인, 부양가족 청년 아프거나 장애청년	•초기 C그룹 → A그룹 이동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살자리	•9~11개월 •월 50만원
사회적 단절자	적극적 구직 아닌자 일자리 및 교육 받으려 하지 않는자 취업지원 가장 힘든 청년 경제적 이외에 사회문화적 요인 코칭 (취업보다, 내면강화·일과 보람·관심사 열정)	•초기 c그룹 → <u>B그룹 이동</u>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살자리	•4-6개월 •월 50만원
기회 탐색자	적극적 구직훈련 기회 찾는자 기존 중앙정부 취성패 이동·전환 중앙정부 및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전환 (서울시 기술교육원, 일자리 카페 연결)	•초기 B그룹	•일자리 •설자리	•3개월 •월 50만원
자발적 니트족	여행, 예술, 음악, 독학 등 기타 활동자 주요 초기 진로모색, 역량강화 대상 그룹	•초기 A그룹 → <u>B그룹 이동</u>	•설자리 •놀자리 •살자리	•4-6개월 •월 50만원

5-3 한국 및 서울시 청년지원제도 청년활동지원사업 검토

□ 청년보장제도 정책 설계 방향 제시(안) - 참여 구간 및 기간



국제적 기준(ILO) 청년정책 대상과 니트 현실 반영 → 3개 유형 재구성

[참조] 한국 중앙 및 지방정부 청년수당 검토 현황

청년고용정책 지원사업 비교

	사업 및 예산	대상	선정기준	지원금	사용가능
고용 노동부 (‘16.9)	청년내일찾기패키지 (前 취성패) * 청년희망재단 기금 활용(1,438억)	34세 이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계층 취업취약계층	고용노동부 취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한정 (구직의지자)	3단계 수당 추가 월 20만원(실비) (최대 3개월 60만원)	면접비용, 구직활동 위한 숙박비, 교통비, 정장 대여 및 사진촬영 등
서울시 (‘16.8)	청년보장제 청년활동지원사업 * 서울시 예산	19~29세 청년 서울 1년 거주 자	활동지원계획서 제출 자 취업자 중 단시간 근로 (30시간 미만) 미취업기간(6개월)	월 50만원(현금) (6개월, 300만원) → ’17년 5천명 (150억원)	구직 활동 각종 학원· 자격증·스터디 비용, 자기진로 모색 및 역 량강화 비용 등
경기도 (‘17.6)	청년구직지원금 * 경기도 예산	19~29세 청년	중위소득 80% 이하 장기 미취업자 등	월 50만원(카드) (6개월, 1천명) (45억, 운영비 15억)	구직활동 관련 비용 사용
인천시 (‘17)	청년취업지원금 * 인천시 예산	19~34세 청년	고용노동부 취업 프로 그램 3단계 참여자	월 20만원(현금) 연간 30억	면접비용, 구직활동 위한 숙박비, 교통비, 정장 대여 및 사진촬영 등

• 주 : 광주, 대전, 대구 등 타 지자체 검토 모색

5-4 한국 및 서울시 청년지원제도 사업검토 현황

1. 청년활동 참여자 집단 구분

청년층 대상과 니트 세부 5개 유형화 → 3개 재구성

2. 청년활동 참여 기간 구분

공통 구간(1구간) - 대상별 구간(2구간) → 프로그램 특성별 적용, 연계

3. 청년활동 참여 연령층 구분

조기 개입 취지 부합 20대 적합 → 30대 노동시장 및 사회보험&실업부조 영역 포괄 대상

4. 청년활동 참여 기간 특성 검토

취약 청년 및 니트(장애, 보호자 간병, 부양가족 청년 등) 참여 기간 확대 → 9개월, 11개월 등

5. 청년활동 수당 운영 지급 방식

시범 사업 기간 현금&카드 병행 운영(2그룹 : 취업자 3개월 총액 20% 전후 사용 유연화)

6. 청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확장

자기 모색 + 일자리 + 교육훈련 + 창업 + 상담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프랑스 '아틀리에')

5-5 한국 및 서울시 청년보장제도 개선방향 검토

	신설·도입	강화·확대	보완·개선
한국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정책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화 요구 확장 □거버넌스 네트워킹 그룹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학교/대학, 연구소 □포탈 사이트 연결,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 논의 - 니트 규모, 직업 소개 등록 □평가&모니터링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수당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 vs. 모색자 □지원조직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공간, 능력 배양 □서울지역 자치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시범 사업(매칭)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 희망자 취업 일자리 부서/교육기관 연결 - 청년 <u>다가가기</u>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회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이후 모교 대학 연결 □활동지원 참여 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6개월 → 유연한 변화 □취약 청년 <u>찾아가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 외톨이, 간병 청년 등 - 고위험 집단 조치 □상호 모범 사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운영 실태 오픈 □서울시 기술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디딤돌 프로그램 활성화
국제 기구 및 해외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단일법, 헌법적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국가 청년단일법 존재 - 헌법적 조항 존재(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 프랑스 노동법 개정 □파트너십과 네트워킹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 폴란드, 오스트라이 - 학교 설명회(벨기에 플란더스) □포털, 통계 사이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불확실, 기관 불신 -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새로운 평가/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일랜드 '반사실적 영향평가' - 이탈리아 '정보 등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이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연동 vs. 상담 지원 □중간 지원 조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460개 센터 □지역 사회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스뜨류뚜라 디 미씨오네), - 프랑스(미씨옹 로칼) 등 □공공취업 지원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웨덴 공공 취업지원 - 아일랜드 '일자리로 가는 길' - 프랑스 '야망클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번째 취업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이탈리아 등 - 조기 학업 중단 방지 □조기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최대 4개월 □EU 다수 타겟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대상 집단 운영 - 청년 니트족 대상 □상호 학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LP 운영 - 취업 분야 □직업훈련,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습, 도제 훈련 제도화



청년보장제

발표 슬라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